



일본에 출원시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 불필요

- 한·일 특허청간 정보화협력 일환으로 양청간 전자적으로 직교환 시행 -

2001년 10월 1일부터 국내에 출원한 특허 또한 실용신안을 기초로 하여 일본에 우선권주장 출원을 하는 경우 일본특허청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국내출원인의 편리함이 크게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파리조약 가입국으로서 양국 국민은 자국에 출원후 1년 이내에 자국에 출원된 발명과 동일하게 취급받기를 상대국에 주장(이를 우선권주장이라고 함)하는 경우, 자국 특허청을 방문하여 출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 우선권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서 상대국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므로 현행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체제는 양국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왔으며 접수된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화하기 위하여 양국 특허청의 행정비용 낭비를 초래하여 왔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국인 불편함과 행정비용 낭비를 개선하고자 우리나라와 가장 많이 우선권 증명서류를 교환하고 있는 일본청(연간 2만건)과 지난 '99년 11월 제11차 한·일 특허청장 회담시부터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오는 01년 10월 1일부터 국내에 출원한 특허 또한 실용신안을 기초로 하여 일본에 우선권주장 출원을 하는 경우 일본청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일본청과 협의를 완료하였다(참고 : <http://www.jpo.go.jp/info/1309-033.htm>)

우선 CD-ROM을 이용하여 일본청과 우선권 증명서류를 교환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시간 교환할 수 있도록 01년 말까지 한·일 특허청간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물량이 많은 미국, 유럽과도 온라인 교환이 가능하도록 미국, 유럽, 일본 3개국 특허청을 연결하고 있는 3국망에 가입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IBM,美 특허 보유건수 최다

미국 IBM이 연구 개발에의 집중적인 투자로 연구소 성공신화를만들어가고 있다. IBM연구소는 미국내 최대의 특허건수를 보유해 중요한 싱크탱크 역할을 함은 물론 알찬 수익을 올려 모기업의 효자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IBM연구소가 지난 한해동안 미국 특허 2922개와 17억 달러의 짹짹한 특허수익을 거두며 기업연구소의 모범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1400여명의 대규모 박사급 인력을 확보하고 지난해만 연구개발(R&D)비로52억 달러나 투자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렇게 잘 나가는 IBM 연구부문도 90년대 초에는 천덕꾸러기였다. IBM 특허기술을 잘 이용해 승승장구하는 휴렛패커드와 선마이크로시스템스 EMC등 경쟁사들을 보며 배만 아파할 뿐이었다.

하지만 93년 루 거스트너 최고경영자(CEO)가 취임해 '혁신'을 강조하면서 연구소는 든든한 후방부대로 자리잡았고 IBM이 주문형 마이크로칩의 최대 공급자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같은 성공 뒤에는 우선 경영시스템과 방법을 꾸준히 재창조해 연구자들이 실용적이고 수익의

로 이어질 작업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이 주효했다.

특히 연구부문 책임자 급에는 IBM내 연관 사업의 실적이나 그 연관 사업운영자의 평가점수와 직결됐고 특히 개발이 IBM의 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문책을 각오해야 할 정도였다.

한편 펠로우로 지정된 연구진은 자유로운 연구 여건과 재정보너스 등의전폭적 지원을 받는 기업 문화도 큰 몫을 했다.

이를 두고 경쟁사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IBM 이야말로 연구소와 회사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하나의 모범을 완성했고 연구자들의 업적이 직접 인정을 받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최근 IBM은 연구부문의 책임자들이 주요 고객사들과 관계를 강조, 고객사를 끌어들이고 연구진들에게 트렌드를 알리는 일도 강화하고 있다.

이 덕분인지 지난해 IBM 총매출은 1%남짓 늘어난 데 비해 연구개발 예산은 약 10% 상승했고 특허 라이선싱 수익은 그보다도 더 급증한 17억 달러에 이르렀다.

출처 매일경제

국유 특허 시장 심막, 활성화 대책 시급

국유 특허의 실용화 실적이 극히 저조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자원위 신영국(申榮國, 한나라) 의원은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99년 기준 정부 공공연구 개발성과 2만2천여건 가운데 실용화된 것은 9.1%인 2천여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특히 올 상반기중 국유 특허 579건 중 23.0%인 133건만이 민간에 이전돼 나머지

446건이 휴면상태로 사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관리해야 하지만 특허청이 기술의 상세한 내용까지 모두 알 수 없으며 특허청의 입장에서는 마케팅등 적극적인 노력을 보일 만한 유인도 없기 때문에 국유 특허가 그대로 사장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신 의원은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기술혁신 선순환 구조 구축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고 성장 잠재력마저 약화되고 있는 만큼 기존의 국유 특허 관련 정보를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해 사업화율을 제고하고 사업화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는 한편 기술이전 활동 촉진방안 강구가 시급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출처 연합뉴스

특허청, 한·일 특허전산망 상호 연결 합의

특허청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3차 한·일 특허청장 회의에서 양국 특허청간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과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 확대, 특허정보 검색 데이터베이스 상호 이용, 화상회의 시스템구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일 특허전산망이 연결되면 양국 특허청간 특허정보 및 각종 문서의 교환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뤄져 일반 민원인에 대한 특허행정 서비스가 한층 향상되는 한편 양국 특허청간 심사기준 등에 관한 정보 및 심사관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

양국 특허청은 별도로 이뤄지고 있는 국제특허출원 조사 및 심사제도를 개선, 영어로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키로 했으며 양국간 특허제도 통일화와 국제무대에서 지식재산



권 규범 논의의 공조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양국 기업의 출원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국 특허청은 민간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매일경제

"미국, 스위스, 특허의약품 공급 비타협 일관"

국경없는 의사회, 옥스팜(Oxfam), 제3세계네트워크 등 비정부단체들은 미국과 스위스 등 일부 극소수 부유한 국가들이에이즈치료제 등 특허의약품의 저가공급을 허용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의진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경없는 의사회 등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과 스위스를 비롯해 일본, 호주, 캐나다 등 5개 선진공업국이 공중보건과 생명보호에 필요한 특허의약품의 거래를 규정하고 있는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협정의 재해석에 제동을 걸고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소집된 WTO의 TPIRS 특별이사회에서 미국과 스위스 등은 협정의 재해석을 요구한 개도국이 50개국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익을대변하면서 비타협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WTO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한 아프리카 진영 회원국들의 요구를 수용, 특허의약품의 적정한 공급을 위해 현행 TRIPS 협정의 재해석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모으고 오는 11월초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리는 제4차 각료회의 선언문에 이를 반영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특별이사회를 소집키로 했었다.

52개 개도국들은 이날 회의에서 TRIPS 협정의 특허의약품 관련 규정이 공중보건과 인명구제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정부의 의약품 접근 능력을 보장하는 쪽으로 재해석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과 스위스 등은 이미 TRIPS 협정 속에 공중보전에 위협을 주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는 '강제실시'와 '병행수입' 등을 규정한 조항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무리하게 제한할 수 있는 재해석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프리카 등 개도국 진영은 TRIPS 협정에 들어 있는 일부 조항들은 세부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발동하기가 극히 어렵고 무역제재 등 보복의가능성이 있어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개도국 진영의 일부 우려를 수용했으나 전폭적인 지지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연합뉴스